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요르단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18년 12월 18일 | 책임조사역(G3) 김희원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9천 km ² 	인구 9.904백만명 (2018 ^e)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친미 노선 
GDP 418.10억 달러 (2018 ^e) 	1인당GDP 4,221.52달러 (2018 ^e) 	통화단위 Jordanian Dinar (JD) 	환율(U\$기준) 0.71 (2018 ^e) 

-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1/2 규모의 국토와 약 9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함.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운송,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발달하여 에너지, 생필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 경기에 민감함.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입헌군주국이지만 국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1999년 즉위한 Abdullah 국왕은 군부와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혁명 당시에 요르단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였으나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평화 시위를 보장하며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였음.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7. 26 수교 (북한과는 1974. 7. 5)

주요협정 무역협정('72), 문화협정('77), 경제 및 기술협정('77), 항공협정('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04),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04), 관광협력협정('05), 원자력협력협정('08), 국방협력협정('09), 무상원조기본협정('13), 군사비밀정보교환협정('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1~10	주요품목
수출	619,985	647,896	441,436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수입	49,306	71,888	38,413	기타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23건, 24,853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3.1	2.4	2.0	2.0	2.3
소비자물가상승률	2.9	-0.9	-0.8	3.3	4.5
재정수지/GDP	-10.0	-4.1	-3.4	-2.6	-2.2

자료: IMF, EIU

경상이전수취 및 관광업 회복으로 경제성장률 소폭 개선

- 요르단 경제는 시리아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침공 등 인접국들의 분쟁 발생과 저유가로 인한 아랍 산유국들의 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침체한 결과 최근 수년간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치고 있음.
- 2014년 IS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몇몇 지역을 장악한 이후 요르단-이라크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이라크와의 국경무역이 차단되었고, 시리아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은 사회불안 고조와 난민 지원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 2017년까지 지속된 저유가 추세가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들에 취업하고 있는 요르단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감소하여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2018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으로 경상이전수취 금액이 다소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경상이전수취(EIU, 억 달러) : 78('14) → 61('15) → 52('16) → 51('17) → 56('18)

- 또한 최근 이라크 정부의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 승리로 역내 정정불안이 완화되면서 요르단 GDP의 약 10%를 점유하는 관광 부문이 회복하여 2018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9년에는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관광수입(EIU, 억 달러) : 43('14) → 40('15) → 40('16) → 43('17) → 48('18)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보조금 감축 및 세율 인상 등으로 개선

- 요르단은 산업 발전이 미진하고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유류보조금 폐지, 2013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 2014년 전력 보조금 추가 삭감, 2016년 차량 이전세율 인상, 2018년 빵 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절감 노력의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4년 -10.0%에서 2018년 -2.2%로 현저히 개선되었음.

국내경제

- 2018년 요르단 정부는 빵 보조금 폐지와 더불어 판매세가 0~4%로 낮게 책정되었던 품목들에 대해 판매세를 10%로 일괄 인상 적용하고, 탄산음료에 대한 특별세를 20%, 휘발유에 대한 특별세를 30%로 인상하는 등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중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및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수년 간 각종 보조금의 삭감 및 폐지 등 물가상승 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에 힘입어 2015년 -0.9%, 2016년 -0.8%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7년 및 2018년에는 식량 및 에너지 국제가격의 완만한 상승, 요르단 정부의 각종 보조금 감축 및 세율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3.3%, 4.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2,612	-3,411	-3,693	-4,257	-4,031
경상수지/GDP	-7.3	-9.1	-9.6	-10.6	-9.7
상 품 수 지	-11,966	-10,333	-9,588	-10,695	-11,228
상 품 수 출	8,385	7,833	7,549	7,511	7,797
상 품 수 입	20,351	18,166	17,137	18,206	19,025
외 환 보 유 액	15,300	15,162	14,019	12,970	12,970
총 외 채	24,839	26,250	27,221	29,022	31,254
총외채잔액/GDP	69.3	70.0	70.4	72.4	74.8
D.S.R.	20.3	26.1	20.6	23.7	23.7

자료: IMF, EIU

높은 수입의존도 및 역내 정정불안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에너지와 식료품의 과도한 대외의존은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높은 수입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IMF, %) : -9.1('15) → -9.5('16) → -10.6('17) → 9.6('18) → -8.6('19^f)

- 요르단은 연료 및 식료품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여, 경상수지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요르단-이라크 국경 정상화로 중계무역 활성화 기대

- 2017년 8월 요르단, 이라크 정부는 양국 간의 국경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요르단 자유무역 지대에서의 중계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라크는 해안선이 매우 짧아(전체 국경선+해안선'에서 해안선 비중이 1.6%에 불과) 내륙국에 가깝고, 유일한 해안 항만인 Umm Qasr 항구도 적체되어 있어, 요르단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중계무역을 통해 주요 물품을 수입해왔음. 향후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으로 인해 요르단 자유무역지대를 거점으로 한 대 이라크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외채상환능력

D.S.R, 총외채잔액 등 외채관련 지표는 미흡

- D.S.R은 2014년 16.3%에서 총외채잔액 증가와 총수출의 감소 추세 전환 등으로 인해 2015년 말 21.5%로 급등하였으며, 2018년에도 21.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방국의 양허성 차관 및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69.3%에서 2018년 74.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도 94.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재정수지 적자 총당 및 주변국 정정불안으로 인한 FDI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14년 153억 달러에서 2017년 130억 달러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연도별 FDI 유입(UNCTAD, 억 달러) : 22('14) → 16('15) → 16('16) → 17('17)

IMF의 대기성차관(SBA) 및 확대신용공여(EFF) 지원 계속

- 요르단 정부는 2012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3년 간에 걸친 2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SBA) 지원을 2015년 8월 다시 3년 간 연장받은 데 이어, 2016년 8월 24일 IMF로부터 3년 만기 7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FF)를 추가 지원받았음.
- IMF는 현재 요르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EFF 제공의 조건으로 동 비율을 77%까지 낮추고 사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걸프 3국의 원조 결정

- 2018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걸프 3국은 요르단 경제 지원을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상기 지원은 요르단 중앙은행 예치금, 세계은행에 대한 보증기금, 5년 간의 정부 재정 지원, 걸프 3국 개발기금을 통한 요르단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 4가지 형식으로 제공될 예정임.
- 2012~2017년 중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걸프 3국으로부터 수혜한 원조금액은 총 27.7억 달러이고, 2011년 3국이 약속한 개발 프로젝트 지원총액 37.2억 달러의 약 73%에 달함.

세계은행의 양허성 차관 제공

- 2018년 7월 세계은행은 요르단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양허성 차관(공정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개발 정책차관) 5억 달러를 제공하였음. 동 차관은 경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보조금 수혜 대상 확대, 개발 프로젝트 지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임.
- 동 차관의 유예기간은 4년 반, 만기는 2035년이고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운 조건으로 제공되었으며, 동 차관을 포함하여 세계은행이 요르단에 제공한 지원금은 총 13억 달러 규모임.

구조적취약성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경제구조

- 요르단은 인광석, 가성칼리 등 일부 광물 외에 현재 생산 중인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이라크·시리아와의 중계무역을 통한 재수출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으나, 동 국가의 내전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재수출이 난항을 겪음.
- 2017년 8월 30일 요르단 및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내 IS 격퇴로 국경지역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무역적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부동산, 관광, 운송 등 서비스업이 GDP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주로 섬유, 비료, 화학원료 등 원자재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그 외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등은 수입에 의존함. 농업 생산량도 미미해 국내 식료품 수요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17년): 서비스업(66.6%), 제조업(28.8%), 농업(4.5%)

취약한 제조업 기반 및 관광산업 타격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 젊은 인구층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접국의 정정불안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2017년 요르단의 실업률은 1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 연도별 실업률(IMF, %) : 11.8('14) → 13.0('15) → 15.2('16) → 18.3('17)
- 요르단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무역구조상 수입 비중이 높아 제품 판매직 및 서비스 직종이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IMF의 권고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임.
- 요르단의 공공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약 96% 규모이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증가하는 대외부채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레반트 지역 중계무역의 거점, 역내 물류 허브 구축

- 요르단은 레반트* 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홍해 연안의 Aqaba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커버하는 중동 서부 지역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 서부 지역을 일컫는 지명
-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과 정치 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정치·사회적 환경도 주변국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개방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 요르단, 이라크 정부가 2017년 8월 30일 양국 간의 국경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라크에서 요르단 남부 아카바로 연결되는 원유공급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임.
- 동 국경은 이라크 지역 내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이라크 남부 국경지역을 장악하면서 2014년 6월 잠정 폐쇄되었으나,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 및 남부 지역의 치안 안정화로 정상화됨.

대외개방적 경제체제와 양질의 노동력 보유

- 요르단 정부는 부존자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외교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외개방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30세 미만의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양호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인간개발지수 순위(UNDP, 전체 189개국): 레바논(80위), 요르단(95위), 팔레스타인(119위), 이라크(120위), 시리아(155위)

정책성과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의 추진

- IMF는 비대한 공공 부문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 이에 요르단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각 부문에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국영 정유회사(JOPETROL), 국영 통신공사, 칼륨개발공사, 인광개발공사, 국영 항공사, 우정국 등이 민영화되었음.
- 전력 부문의 경우 NEPCO(국영전력공사)는 현재 송전만 담당하며, 발전과 배전은 모두 민영화됨. 단, 발전기업인 중앙전력공사(CEGCO)는 요르단 정부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시리아, 이라크 난민의 유입으로 요르단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87%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 암만의 인구는 174% 이상 증가하였음. 현재 암만의 인프라로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요르단 정부는 2017년 10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함.
-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수도 암만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39km²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1차 계획임. 전체 신도시 프로젝트 규모는 총 390km²으로 2050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임.
- 동 프로젝트로 인해 요르단 건설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요르단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 중임.

정책성과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요르단 정부는 자본 및 기술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조하여, 현재 까지 미국, 캐나다, EU,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 터키 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음.
- 요르단은 앞서 1997년 아랍연맹 회원국들로 구성된 대아랍자유무역지대(GAFTA)에도 가입하였음.
- 또한 대미관세면제특구(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 Aqaba 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 산업개발구역, King Hussein Business Park, Irbid 개발구역 등을 조성하는 등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FDI 유입액은 IS 사태로 인한 주변국 정정불안 및 저유가 지속에 따른 GCC 산유국들로부터의 FDI 유입 감소로 인해 2014년 22억 달러에서 2016년 1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이라크 IS 격퇴 등에 힘입어 17억 달러로 소폭 상승하였음.

※ 연도별 FDI 유입(UNCTAD, 억 달러) : 22('14) → 16('15) → 16('16) → 17('17)

정치동향

복잡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 유지

- "아랍의 봄" 및 최근 시리아, 이라크, IS 사태 등 주변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Abdullah 국왕의 통치하에 안정된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개혁 등이 꾸준히 진행 중임.
- 요르단은 국왕이 외교, 국방, 행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국왕은 군부와 정보기관 수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대법관과 상원의원까지 정부/의회의 승인 없이 임명할 수 있음.
- 1999년 즉위한 Abdullah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패 척결, 행정 투명성 증대, 금융제도 개선 등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요르단 사회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팔레스타인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와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보수주의 세력의 반대 등이 개혁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정당이 친국왕,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도 수시로 변경되고, 의원의 다수가 무소속으로 정당의 역할이 아직 제한적인 편이나, 무슬림형제단의 정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은 상대적으로 높은 결집력을 보이고 있으며(2016년 9월 총선에서 하원 130석 중 16석을 차지하여 단일 정파로서는 최대 의석 확보),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2018년 6월 Hani Mulki 총리 사임 이후 Omar al-Razzaz 총리 내각 출범

- 2016년 6월 새로 임명된 Mulki 총리는 난민 사태, 주변국과의 국경 폐쇄 등으로 정부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물가상승률, 실업률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였음.
- 그러나 요르단은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8.3%가 실업상태에 있고, 약 20%는 빈곤층이며, 요르단 정부 추산 기준 시리아 난민 130만 명(UN 등록 기준 66만 명)이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여 수년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음.
- 최근 소득세법 개정 추진, 보조금 감축 등 긴축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 Mulki 총리는 사의를 표명하였고, Abdullah 국왕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교육장관 al-Razzaz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여 2018년 6월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였음.

사회동향

물가 상승 및 생활고 속 소득세 인상 추진으로 시위 발생

- 중동 국가들에 공통된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수혜 조건인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보조금 축소, 공공요금 인상,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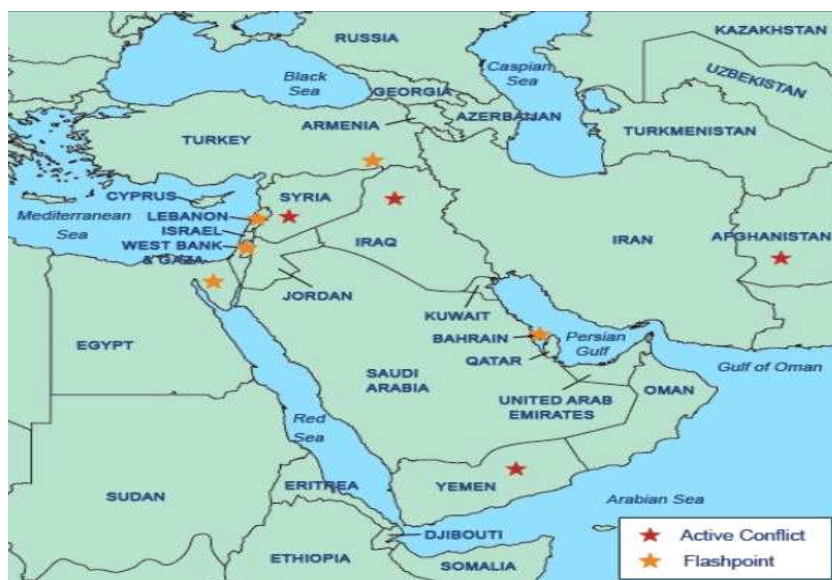
※ 연도별 실업률(IMF, %) : 11.8('14) → 13.0('15) → 15.2('16) → 18.3('17)

사회동향

- 2018년 초부터 암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었으나, Abdullah 국왕은 신속한 내각 교체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면서 여전히 신임을 얻고 있음.
- 2018년 6월 Mulki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면서 시위가 확대, 과격화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한 채로 마무리되었음.

인접국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사회불안 가중

- 인접국들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내전 또는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계속 유입되어 왔음.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하고 보건, 교육, 범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12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급증한 시리아 난민은 요르단 정부 추산 130만 명(2018년 6월 UN 등록 기준 약 66만 명)으로 요르단 인구의 13%에 육박하고 있음.
- 2018년 10월 15일 시리아 정부군의 승리로 3년 전 내전 격화로 폐쇄하였던 자베르-나십 국경을 개방하면서 난민 유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요르단 정부는 2017년 시리아 난민 위기 대응계획(JRP)에 대한 공여국들의 지원액이 전체 소요액인 27억 달러의 약 67% 수준인 18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공여국들에게 요르단에 약속한 기금지원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주요 국가별 지원규모: 미국 4.6억, 독일 2.3억, EU 4.4억, 영국 0.8억, 사우디아라비아 0.7억 달러 등



자료 : BMI Research

사회동향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주민 간의 갈등 상존

- 요르단 강 동안(East Bank)에 거주하는 토착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왕과 군부-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을 장악해 옴.
- 1948년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 및 그 2세대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난민 신분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토착 주민과 팔레스타인계 주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요구도 양극화되어 정치개혁의 방향 설정 및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왕 주도의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IAF가 주도하는 도시 하층민의 시위는 정치 자유화, 정부기구의 대표성 강화 및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 토착 요르단인들은 제도적 특권 유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공공 부문 현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임.

국제관계

친서방 노선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아랍 국가

- 요르단은 온건 아랍 세력의 대변자로 친미·친서방 정책과 함께 주변 아랍 국가와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중동 평화협상의 핵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임.
-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전통적 중립 외교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슬람과 서방 간의 대립 해소를 위해 '온건 이슬람 운동'을 추진하고 이라크 재건사업 및 전(全)지구적 차원의 개혁·발전과 관련해 국제회의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6.6억 달러(경제지원 3.6억 달러, 군사지원 3억 달러)를 정기 지원하는 최대 원조국으로, 2013년 7월 시리아 난민 수용 등 지역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17년 동안 요르단에 3.4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추가 지원,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미국은 대출보증을 통해 요르단 정부의 15억 달러 규모 국채발행을 지원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요르단을 지원하고 있음.

이스라엘과는 원만한 관계 유지

- 1948년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 및 그 2세대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은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 적대관계인 이스라엘과 1994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당시 요르단이 미국에게 지고 있던 약 7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대표적 우방국가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압박하였고, 요르단은 1994년 이집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아랍국가가 되었음.

국제관계

주변 중동 국가와 우호적 관계 유지

- 리비아, 이집트, 예멘 등 주변 지역의 정정불안이 가중되고 테러 세력이 준동하고 있어,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은 같은 수니파 출신 국왕이 통치하는 요르단에 대한 원조를 통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라크 및 시리아와의 국경 정상화

- 2017년 8월 30일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 및 남부 지역 치안의 안정을 이유로 요르단, 이라크 간의 국경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18년 10월 15일 시리아 정부군의 승리로 3년 전 내전 격화로 폐쇄하였던 자베르-나십 국경을 개방하였음.

외채상환태도

여러 차례의 리스케줄링 경험

- 요르단은 파리클럽과 1989~9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8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상환을 연기하였으며,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다시 총외채의 17%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
- 2017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에 대한 연체금액은 중장기 채무 4,420만 달러로, 2016년 9월 기준 5,700만 달러 대비 감소하였음.
-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Moody's, 2018년 11월 요르단의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04년 10월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요르단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계속 5등급으로 유지함.
- Moody's도 2013년 6월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요르단의 신용등급을 Ba2에서 B1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 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18년 11월 점점 악화되는 국제금융 및 무역환경 위기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의 재정 개혁 노력과 원조 수혜 지속 전망, 에너지원 다원화 노력 등을 바탕으로 B1 등급을 유지함.
- S&P는 과중한 공공부채 및 외채 규모,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근거로 2017년 10월 요르단의 국가 신용 등급을 BB-에서 B+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18.01)	5등급(2017.01)
Moody's	B1 (2018.11)	B1 (2016.11)

- 요르단은 최근 수년 간 시리아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침공 등 인접국들의 분쟁 발생과 저유가로 인한 아랍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수출이 침체한 결과 2%대의 저조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8년 관광업 및 국제유가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었음.
-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연료 및 식료품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상수지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Abdullah 국왕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잇따른 보조금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018년 소득세 인상 개정 추진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겪음.
- 요르단은 온건 아랍 세력의 대변자로 친미·친서방 정책과 함께 주변 아랍 국가와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중동 평화협상의 핵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임.
- 과거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고 우방국의 양허성 차관 및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8년 74.8%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잔액 비중도 94.2%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채관련 지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여, 요르단의 신용등급으로 직전 평가결과와 동일한 C3 등급을 부여코자 함.